

나라살림 104.8兆 적자... “취약층 복지 등 민생지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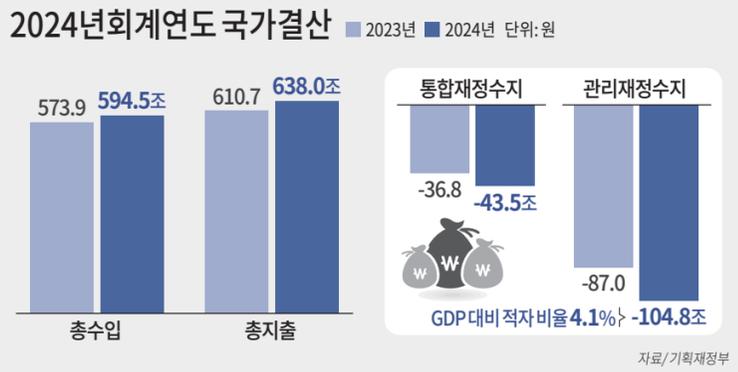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총수입 594.5조, 총지출 638조 GDP 대비 적자규모 4% 웃돌아 기재부 “국가채무, 전년보다 줄어”

지난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적자다. 나라살림 적자는 지난 2022년 100조 원대에 달한 뒤 2023년에 80조 원대로 줄었으나 2024년에 다시 늘어났다.

정부는 경기 둔화·침체 상황에서도 취약층 복지 포함한 민생 지출을 유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에 비해 20조5000억 원 증가한 594조5000억



원, 총지출은 27조3000억 원 증가한 638조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 규모였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 원 적자였다.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112조 원)과 2022년(-117조 원)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불어난 것과 관련해 “세입이 감소했음에도 민생 관련 지출을 최대한 유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수지는 세입 결손을 그대로 사업비 불용(쓰지 않은 예산)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화했지만, 재정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국가채무

(1175조2000억 원)는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수익에서 30조8000억 원이 핑크가 났는데 정부가 실질적으로 돈을 쓰지 않은 규모는 15조 원이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그래서 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고, 국채를 발행해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1%에 달했다. 이 수치는 2022년 5.0%에서 2023년 3.6%까지 내려왔으나 다시 4%대로 진입했다.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취임 이후 ‘재정준칙’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나라살림살이는 2019년(2.7%) 이후 매년 이 수치를 초과해 왔다.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46.1%로 전년대비 0.8%포인트(p) 줄었다.

작년 총세입 중 국세수입(336조5000억 원)은 법인세 감소(-17조9000억 원) 등의 영향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과 비교해 7조5000억 원 줄었다. 2024년 세입 예산에서 계획했던 액수(367조3000억 원)에 비해서는 30조8000억 원이나 세금이 덜 걷혔다. 반면 세외수입(199조4000억 원)은 2023년 결산 대비 46조5000억 원 늘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4조5000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원이 었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000억 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조6000억 원은 특별회계 자체 세입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정산대금 지연 수면위로 유통업계, 책임소재 공방

기업회생 후폭풍

홈플러스 “일방적 납품 중단 영향” 농축산업체 “책임 전가하려 무리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정산 대금 지연 문제로 농축산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홈플러스가 납품 계약을 재개하지 않는 일부 대기업 협력사 및 관련 단체를 향해 2차 농가 피해 책임을 묻자, 이에 농업인단체는 홈플러스가 적반하장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농축산 납품 업체와의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홈플러스가 자사와 납품 재개를 하지 않는 기업 및 단체를 직접 언급하는, 강경한 입장문을 내면서다.

홈플러스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 22개 농축산단체들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가 홈플러스의 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농축산물을 유통하는 농축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농축산업계 피해가 커진 책임은 자사와 납품 재개를 하지 않고 있는 대기업 협력사 및 단체에 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서울우유 등 소수의 일부 대기업 협력사가 회생채권 전액 즉각 변제, 물품 대금 현금 선납 조건을 요구하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래 규모를 축소했다”며 “이는 일부 대기업과 주요 이해단체들이 정상화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자신의 뒷만 챙기려는 ‘비오는 날 우산 빼기’ 식의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축산물 관련 대형 협력사의 경우 영세한 2차 협력사 또는 농축산 농가들이 제품의 원료를 공급하

는 경우가 많은데, 1차 협력사가 갑작스럽게 물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납품량이 줄어드는 등 그 피해가 2차 협력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농협경제지주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농협경제지주는 변제하지 않은 미지급 회생채권이 없고 모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채권 한도를 대폭 축소하였다”며 “지역단위 농협 중 상당수가 거래가 중단되거나 축소됨에 따라 많은 쌀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농축산연합회는 곧바로 성명문을 내고 홈플러스가 책임을 전가하려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축산연합회는 “홈플러스가 농협경제지주, 서울우유협동조합 등 농축산업계에서 일방적으로 납품을 중단해 2차 협력사와 농가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난데없이 연합회의 전향적인 결정을 요구했다”며 “여론의 화살을 농축산업계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의 적반하장은 소도 웃을 일”이라며 “홈플러스는 지금이라도 농축산업계 피해에 대해 전국 농업인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이행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내에서도 홈플러스가 무리한 주장으로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본인들과 납품을 재개하지 않는 기업이나 단체에 강경하게 나올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갈등을 조장해 좋을 것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사람, 그곳에 DB의 꿈이 있다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드는 꿈
고객의 내일이 풍요로워지는 금융을 만드는 꿈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꿈

DB 모두의 마음 속엔 꿈이 있습니다

보험	금융	반도체 · IT